

與 “한,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 ‘시간끌기’ 비판

한덕수 권한대행

권성동 “권한 행사 범위 등 살펴야”
‘6인 체제 탄핵 심판시 유리’ 판단
민주 “탄핵절차 지연작전 포기를”
“인청 참여 안하면 오늘 회의 개최”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연내 임명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17일 발목을 잡으면서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가 ‘9인체제’가 아니라 3인의 공석을 채우지 않고 현재의 ‘6인체제’로 탄핵안을 심리해야한다는 얘기가.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추미에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

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들은 기준에 친야 성향의 다소 편향적인 판결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임명이 돼서 대통령 탄핵 재판을 한다

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을 하면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정족수는 재판관 6명 이상으로,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터무니 없다”라고 강

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심판의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 111조2항을 거론하며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헌법 정신이고 사실상의 의무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받아들여 6명 재판관으로 심리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위법 심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끊임없이 지적된다. 국회는 이런 위법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할 경우 18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단독 개최를 위한 위원장 교체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종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온갖 궤변을 앞세워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 이후에도 민심을 외면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감싸고 있는 국민의힘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최후통첩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계엄 포고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사진) 육군참모총장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내란중요임무중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과 사법 사무를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모든 정치활동 금지’, ‘처단’ 등이 적시된 포고령 1호를 발표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박 총장은 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에게 전화를 걸어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 통제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윤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을 찾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 총장 등과 회의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2차 계엄’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광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으나 이를 막았으며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

인공지능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연내 처리 전망

국회 법사위 통과

정부가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지원 하도록 규정한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30일)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의 국가AI위원회를 두고 AI 산업 진흥과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인공지능의 신뢰성 및 윤리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국가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딥페이크, 허위정보 등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한국방송공사(KBS) 등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 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내년 도입을 앞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尹측 “내란죄 요건 안돼... 대통령, 직접 변론할 것”

“수사·현재 절차 동시 진행 어려워”
“검·경 동시 수사 조정 필요성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안이 결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으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수사와 탄핵 절차는 엄연히 구분되고, 두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과 경찰 간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절차에도 대응하고, 수사 절차에도 대응해야 한다. 수사는 경우에 따라 강제수사로도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도 지금 두개 또는 세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출석요구, 강제수사 등을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

런 부분은 정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수사기관들의 무분별한 소환 통보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검찰과 경찰 중 어느 쪽으로 출석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검토한 뒤 판단해서 입장을 발표하겠다.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그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쪽의 문제”라며 “변호를 맡기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생각을 나는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는 김홍일 전 방수통신위원장과 고검장 출신인 윤갑근 변호사 등이 합류할 전망이다. 다만 이들은 아직 정식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내란 수괴 지적에 대해 “내란죄 조항을 한번이라도 읽어

봤다면, 법률가들 입장에서 간명하게 죄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정권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폭동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원론적으로는 본인이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그리고 정말 소신껏 입장을 펼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언제 공개변론이 열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1차 소환 통보 당시 출석요구서에 ‘내란 수괴’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

검찰 특수본은 ‘오는 21일까지 조사를 받으라’며 2차 통보까지 한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공수본)는 ‘오는 18일까지 소환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황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은尹 문건 “계엄 예비비 확보”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밝혀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전달 받아 보관 중이던 비상계엄 조치 관련 쪽지에 대해 “계엄 관련된 예비비 재정자금 확보” 정도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윤인대 차관보는 17일 오후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차관보는 쪽지의 내용을 묻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 정도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F4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부분 재정

관련 내용이라서 그 외에는 다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부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쪽지를 실무자로부터 참고자료로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쪽지를 F4 회의 후 윤 차관보에게 맡겼고, 간부회의가 끝난 다음날 오전 1시50분께 내용을 확인했다고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